

Vol.99

2022
WINTER

열린 충남

권두언

더 큰 꿈이 깃드는 아산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특집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아산만 순환철도 특징과 쟁점 사항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충남의 문화관광계획

현안연구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필요성 검토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 정책 방향의 모색

| | | |
|-------------|----|--|
| #권두언 | 04 | 더 큰 꿈이 깃드는 아산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김영석 베이밸리추진단장(전해양수산부장관) |
| #특집 | 06 |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아산만 순환철도 특징과 쟁점 사항 김형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충남의 문화관광계획 안용주 선문대학교 교수 |
| #현안연구 | 24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필요성 검토 윤항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 정책 방향의 모색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
| #열린마당 | 36 | 기후정의 열차와 함께 한 924 기후정의 행진 조순형 기후위기충남행동운영위원장 |
| #언론이 바라본 충남 | 40 | 충남 경제 취약점은? 대기업 편중-시·군 간 불평등-인구감소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청본부장 |
| #인권 A to Z | 43 | 충남연구원 인권 통합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 일터를 고민하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 외 |
| #연구원 소식 | 49 |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서 충남도 우수 정책사례 발표 농산물가공수출·국방산업·차량 반도체 등 충남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빅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공유의 장 마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힘센 충남 미래 청사진 마련할 터 |



04 권두언
더 큰 꿈이 깃드는 아산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18 특집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충남의 문화관광계획



30 현안연구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
정책 방향의 모색



43 인권 A to Z
충남연구원 인권 통합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
일터를 고민하다



40 언론이 바라본 충남
충남 경제 취약점은?
대기업 편중-시·군 간 불평등-인구감소

더 큰 꿈이 깃드는 아산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을 끼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산마테오 카운티에는 세계적인 FANG(메타,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테크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름하여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IT, 인터넷 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첨단기술 연구단지로 스탠퍼드 대학 등이 스타트업 창업을 전격 지원하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 이러한 실리콘 밸리에 착안하여 아산만 일대에 첨단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로봇,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UAM(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산만 일대는 인구 330만 명과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 (GRDP)이 204조 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막대하다. 또한 삼성, LG, SK, 현대차와 쌍용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어 지역발전 잠재력은 무궁해 보인다.

베이밸리 전략은 충남과 경기를 포괄하는 초광역 경제권에서 어찌 보면 ‘새로 판을 짜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발판 삼아 **‘기존의 여러 요소를 잇고 지원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조해 나가면서 국가 재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도이다.

지난 9월 29일 충남, 경기 양 도지사는 통 큰 결단 하에 초광역 혁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력과제 9개 사업은 ▲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103.7km) 건설 ▲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 충남·경기 해안지역 국제적 관광지(k-골드코스트) 조성 ▲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 서해안권 마린나 거점



김영석 | 前 해양수산부장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합동 추진단 공동단장

공동 육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 충남·경기 현안 사항 및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 연구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연접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강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복원하고, 민관 상생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수요를 위해 서북부권 용수 확보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관련기업 거점화 및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하고, 또한 초광역 도시권 정주체계를 구상하여 고급인재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 정주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큰 그림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웨덴이 조선업의 종말로 상징되는 ‘말뫼의 눈물’을 극복하고 예코IT 도시로 다시 태어난 모델을 상기하고, 사우디가 두바이를 초월하는 네옴 시티를 그려나가듯 더 새로운 꿈과 영감이 필요하다.** 첨단적 미래전략에 개발과 환경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고, 대학과 기업이 통 큰 협력으로 상생 및 지원 구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강한 리더십과 소통을 통해 파격적으로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또 경기도와 충남도가 프로젝트별로 전문가팀을 만들고 세미나와 포럼을 수시 개최하며 디테일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산업, 경제, SOC, IT, 환경, 제도정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니만큼 첨단산업 및 공간설계 전문가들과의 현장 기반의 소통과 협력에 기존의 틀을 깨는 메가적/메타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지자체는 입주 기업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기업으로 유입되고, 기업 간 집적으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더욱 많은 기업이 아산만으로 향할 것이다. 아산만이 커질수록 충남의 경제, 대한민국의 동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긴요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아산만 일대의 개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각 사업들의 논리와 타당성을 입증하여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과 경기 도민의 관심도 베이밸리의 성공적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이밸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길 바라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 지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

베이밸리는 미래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재설계하고, 충청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선도모델로 발전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특 집

○ ● ○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아산만 순환철도 특징과 쟁점 사항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충남의 문화관광계획

특
집
—
01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홍원표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도와 경기도 양 지사는 지난 9월 29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충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개 협약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산업 협력과 교통인프라 구축이다. 아산만 일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집적지다.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지역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경기도나 충남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사안이 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이슈다.

이 글에서는 아산만권의 성장 잠재력을 우리나라 경제성장 역사, 국토공간축 그리고 산업과 일자리 구조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역사와 아산만권

아산만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로 올라선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표 1]이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래 4차례의 경제도약을 이루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이었다. 가발, 직물, 의류 등이 주된 수출품이었다. 이 시기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 방향이 결정되었다. 두 번째 도약은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인데, 주로 울산, 포항 등 동남권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했다. 세 번째 도약은 1990년대 주로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네 번째는 2010년대부터 현재 진행 중으로 바이오, 정밀기계,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아산만권은 사실상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 번째 도약 시기 즉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의 성장 시기에 전국적으로 중요한 산업집적지로 자리를 잡았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이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중화학공업이 이 시기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전기·전자 등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아산만권의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1988년 가동을 본격화했고, 기아차 화성공장이 1989년에 준공했다. 1990년대 중반

부터는 아산 탕정 등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현대차 인주 공장 등 자동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2010년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평택 등에 대규모 제조시설이 입지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4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세 번째 경제도약이 아산만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시기적으로 초기에는 충남북부가 집중적으로 투자의 수혜를 입었는데, 후반부터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남부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현재와 같이 아산만권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아산만권의 경제성장 과정은 아산만권의 고유한 자연 또는 인문사회 자원에 착근한 경제 성장이라기보다는 수도권 근접, 항만 시설 접근성 등 입지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아산만권의 지속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의 산업지대와의 경쟁에 항상 노출되는 취약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근처로 제조입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1 | 우리나라 경제도약의 개요

| 경제 도약 | 1번째 | 2번째 | 3번째 | 4번째 |
|--------|------------|------------------|-------------------------|----------------------|
| 해당 시기 | 1960년대 | 1970년대 | 1990년대 | 2010년대 |
| 핵심 산업 | 경공업 | 중화학공업 | 전기·전자, 자동차 | 바이오산업, 콘텐츠산업 |
| 전형적 제품 | 가발, 직물, 의류 | 철강, 석유화학, 조선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부품 | 의약, 정밀기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
| 개발 지역 | 대도시 | 동남권 (포항, 울산, 창원) | 중부권(천안, 아산, 평택, 용인, 화성) | 대도시(서울, 인천, 대전, 부산) |
| 비고 | 경부축 도시 | 국가산업단지 | 수도권 외곽 | R&D와 디자인 중심 |

아산만권은 국토 공간상으로 보면 수도권 외곽과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비수도권인 충남 북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거대 수도권의 주변부라 할 수 있다. 이 권역이 국토 공간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산만권은 경부축, 서해안축, 중부동서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그림 1] 참조).

경부축은 서울-천안-대전-대구-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축으로 경부철도, 경부고속도, 경부KTX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아산만권에는 오산-평택-천안 등을 거치고 있다. 아산만권에서 가장 시가지가 발달한 지대다. 서해안축은 서해안을 따라 형성된 발전축이다. 인천-안산-화성-평택-당진-홍성-새만금-목포를 잇는 축이다. 이 축은 1990년대 서해안

국토 공간축과 아산만권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형성되었고 대중국 수출입의 활성화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중부동서축은 서쪽에서부터 서산-당진-아산-천안-청주-충주-제천-울진을 잇는 축이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이 지역을 따라 이차전지산업, 태양광산업 등 두터운 산업축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부동서횡단철도는 이러한 축을 철도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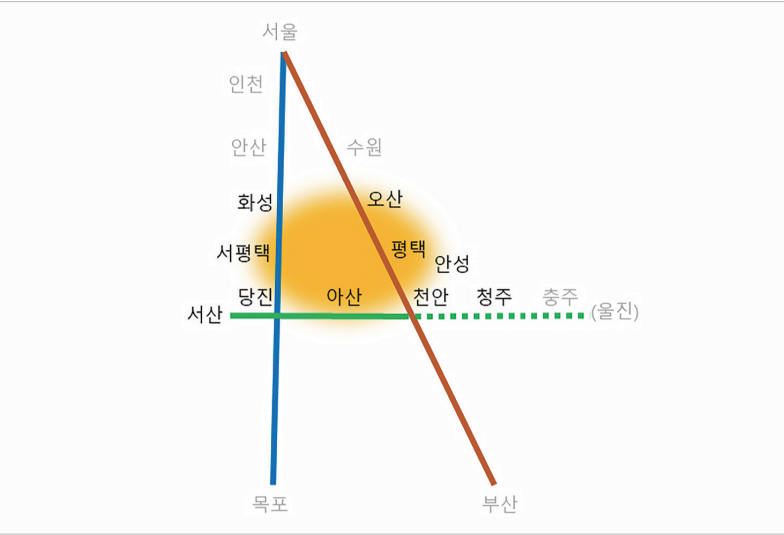
아산만권은 세 축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산만권은 수도권의 초광역대도시의 복사력을 비수도권에 전달하는 매개자 지역이다. '승상기하(承上起下)'라는 사자성어처럼, 위를 받치고 아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수도권의 복사력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산만권은 연결한 성장축이 3개나 되는 지대다. 이는 전국적으로 혁신을 확산하기에 적격지라는 의미다. 경부축으로 따라 대구, 부산에 이르고 서해안축을 따라 충남 남부, 새만금, 목포에 이를 수 있고, 중부동서축을 따라 청주, 충주, 울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축을 세 개나 끼고 있기 때문에 아산만권의 혁신과 성장은 전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셋째, 아산만권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개방적인 지역이어야 한다. 아산만권이 수도권 중심부와 폐쇄적인 경영-생산 분업 및 협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자기 완결적 구조는 아산만권의 잠재력을 제한할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아산만권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산만권이 타 지역에게는 혁신의 매개자가 아니라 혁신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그림 1 | 아산만권을 둘러싼 국토성장축



아산만권의
일자리와 산업

아산만권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2019년 종사자 기준 아산만권의 2차 산업(광업과 제조업) 비중은 39.95%로, 전국 평균인 18.15%의 두 배가 넘는다. 3차 산업 비중은 53.73%로 전국 평균인 74.17%보다 현저히 낮으며, 권역 내부에서는 오산시가 74.25%로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인다. 특히 충남 아산시는 43.58%, 경기 화성시는 45.46%로 매우 낮다.

| 표 2 | 아산만권의 산업 구성

| 구분 | | 생산(2019) | | 산업구성(산업별 종사자 기준, 2019) | | |
|------|-----|----------|--------|------------------------|--------|--------|
| | | GRDP | 전국비중 | 1차 | 2차 | 3차 |
| 전국 | | 1,927.42 | 100.0% | 1.05% | 18.15% | 74.17% |
| 아산만권 | | 204.32 | 10.6% | 0.22% | 39.95% | 53.73% |
| 경기남부 | | 121.86 | 6.3% | 0.21% | 42.39% | 51.41% |
| | 평택시 | 31.41 | 1.6% | 0.33% | 36.44% | 56.09% |
| | 화성시 | 76.11 | 3.9% | 0.06% | 49.26% | 45.46% |
| | 안성시 | 8.90 | 0.5% | 0.80% | 40.57% | 53.29% |
| | 오산시 | 5.45 | 0.3% | 0.00% | 17.35% | 74.25% |
| 충남북부 | | 82.46 | 4.3% | 0.24% | 36.49% | 57.02% |
| | 천안시 | 23.21 | 1.2% | 0.15% | 28.72% | 65.76% |
| | 아산시 | 30.25 | 1.6% | 0.21% | 51.08% | 43.58% |
| | 당진시 | 17.53 | 0.9% | 0.54% | 38.55% | 52.66% |
| | 서산시 | 11.47 | 0.6% | 0.35% | 29.89% | 59.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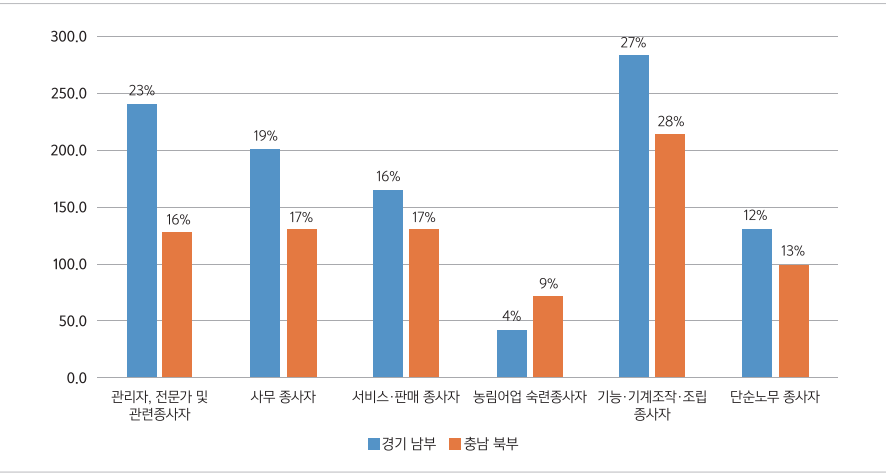
(단위 : 조)

한편 직업별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우선 아산만권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현저히 많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산만권은 경기 남부나 충남·북부 모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전체 종사자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전국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1.6%, 사무종사자는 17.2%,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1.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5.5%,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19.6%, 단순노무자는 14.6% 등이다(통계청 지역고용조사 발표 자료, 2021. 4. 21.). 이와 비교하면 아산만권 취업자는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27~28%로 현저히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경기 남부는 충남 북부와 비교하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많지만,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작다.

결국 일자리 구조로 보면 아산만권은 사실상 '분공장경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천안·아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장지대로서 대도시권 서비스산업이 미약한 상황이며, 연구개발, 디자인, 경영지원 등 고차원 경영지원 인력은 적고 가공조립 등 기능직 인력은 많은 일자리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그림 2 | 아산만권(경기남부와 충남북부)의 직업별 종사자 현황(2021)



아산만권의
미래 위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산만권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대집적지이자 경부축, 서해안축, 중부 동서축 등 세 개의 발전축을 끼고 있는 요지다. 그러나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밀집한 '공장지대'이기도 하다.

이런 권역이 전국적으로 의의 있는 지역이 되려면, 새로운 혁신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의 혁신 성과(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지역으로 머무르거나 신흥국의 신흥지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이 혁신의 발원지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내의 사례에서 한때 흥성했던 제조 집적지가 쇠락한 산업단지(rust belt)로 쇠퇴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한때 미국의 자동차산업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의 침체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희망도 있다. 중국 선전(Shenzhen)은 국제 기업들의 하청공장지대에서 지금은 화웨이, DJI, BYD 등 세계적 기업들의 본사를 가진 혁신의 대표도시로 탈바꿈했다.

아산만권은 제조업에 기반을 가진 제조혁신의 발원지로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국내·외 사례가 가리키는 바이고, 아산만권의 전국적 위상이 요구하는 바다.

아산만 순환철도 특징과 쟁점 사항

김형철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기도가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의 경제 산업지도를 재 설계하여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내용에는 아산만(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등을 포함한 9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산만 지역은 미래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산업단지, 중국 교역을 담당하는 국제 무역항과 배후단지, 서해안의 국제적 내륙·해양 관광지 등이 있고,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특징이 있다. 순환철도의 역할은 이처럼 아산만에 있는 경제, 무역, 관광 거점지역들을 연계하고 여객과 물류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문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아산만 순환철도의 개요, 순환철도 영향권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택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해인구, 통행량 수준 등의 특징을 소개한다. 또한, 아산만 순환철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제시한다.

아산만 순환철도 개요

아산만 순환철도는 기존 경부선과 장항선,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과 평택선, 장래에 계획 중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이 연계된 노선이다. 순환철도가 주로 운행하는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등이고, 일부 예산군과 당진시 지역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순환철도의 총연장은 103.7km이고 전철화 비용과 신규 노선 건설비를 고려할 때 대략 9,600억 원 정도의

| 표 1 | 아산만 순환철도 개요

|  | 노선개요 | | | | |
|---|------|--------|--------------------------------|--------|-----------------|
| | 구분 | 노선 | 경유역 | 연장(km) | 비고 |
| | 기존노선 | 경부선 | 평택-성환-직산-두정-천안 | 21.6 | 기존선 |
| | | 장항선 | 천안-봉명-쌍용-아산-탕정-배방-온양-신창-도고-신례원 | 29.7 | 기존선 |
| | 신규노선 | 신례원-합덕 | 신례원-합덕 | 12.0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미연결구간 |
| | 건설 중 | 서해선 | 합덕-인주-안중 | 27.0 | 2023년 개통예정 |
| | 건설 중 | 평택선 | 창내-서해선합류(안중) | 4.6 | 단선 비전철, 화물수송 |
| | | | 평택-창내 | 8.8 | |
| | 총계 | | | 103.7 | |

출처 : 충남도청,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2.09.

영향권 지역의 특징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1) 사회경제지표

순환철도가 연결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등이다. 해당 지역의 기초적인 사회경제지표를 검토한 결과 인구수, 가구 수, 승용차 수,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GRDP)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승용차 수는 연평균 5~7%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천안시가 가장 많고 평택시, 아산시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지역내총생산의 규모는 평택시, 아산시, 천안시 순으로 크며, 증가율도 평택시가 11%를 상회하고, 아산시 8.5%, 천안시 5.4% 수준이다. 순환철도가 연결하는 3개의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와 승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 | 영향권 내 사회경제지표



출처 : 각 지역별 통계연보.

2) 택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지역의 택지, 도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총 19건이다. 택지, 도시 개발계획은 14건으로 천안시 10건¹⁾, 아산시 1건²⁾, 평택시 3건³⁾ 등이 있다. 이 중 계획인구 3만 명 규모

1) 천안시 택지, 도시 개발계획 : 부성지구, 새터말지구, 성성1, 2, 3, 4지구, 백석5지구, 구룡지구, 업성지구, 부대지구 등.
2) 아산시 택지, 도시 개발계획 : 아산 탕정지구.
3) 평택시 택지, 도시 개발계획 : 고덕지구, 화양지구, 청북지구 등.

이상인 사업은 평택 고덕지구(88,194인), 평택 화양지구(54,084인), 아산 탕정지구(34,476인) 등으로 검토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5건으로 아산시 4건⁴⁾, 평택시 1건⁵⁾ 등이 있다. 이 중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단은 종사자가 약 4만 3천 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 순환철도가 연결하는 지역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택지, 도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인해 인구, 종사자, 승용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이 발전하면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3) 영향권 내 수혜인구

순환철도 수송수요와 관련된 영향권을 설정⁶⁾하고 5km 이내의 영향권에 속하는 인구수를 검토한 결과, 천안시는 586,828명(천안시 전체인구 대비 86%), 아산시는 264,362명(아산시 전체인구 대비 75%), 평택시는 312,508명(평택시 전체인구 대비 56%)으로 검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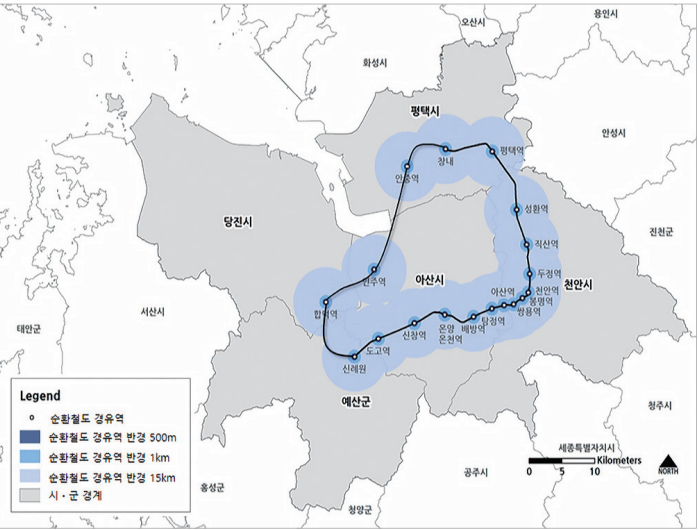
| 표 3 | 영향권 내 수혜인구

| 구분 | 총인구수(A) | 사업노선 영향권 | | | | | |
|-----|---------|------------|------------|-----------|------------|-----------|------------|
| | | 반경 500m 이내 | | 반경 1km 이내 | | 반경 5km 이내 | |
| | | 인구수(B) | 비중B/A*100) | 인구수(C) | 비중C/A*100) | 인구수(D) | 비중D/A*100) |
| 천안시 | 685,194 | 69,205 | 10% | 203,115 | 30% | 586,828 | 86% |
| 아산시 | 351,665 | 16,540 | 5% | 90,621 | 26% | 264,362 | 75% |
| 평택시 | 561,770 | 12,377 | 2% | 27,327 | 5% | 312,508 | 56% |
| 당진시 | 171,957 | 74 | 0% | 264 | 0% | 9,922 | 6% |
| 예산군 | 76,974 | 1,542 | 2% | 4,456 | 6% | 27,863 | 36% |

주 : 반경 내 인구수 산출은 GIS 활용, 총인구수는 2021년 통계자료 활용.

4) 아산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인주일반산단1, 인주일반산단3,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단, 탕정 일반산단 등
5) 평택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6) 순환철도 영향권 500m는 도로로 이용이 가능하고, 반경 500m ~ 5km의 영향권은 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철도역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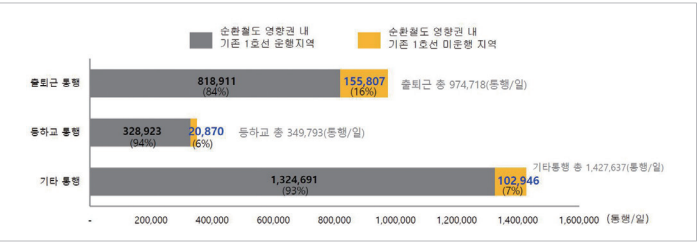
| 그림 1 | 순환철도 영향권



4) 영향권 내 통행량

순환철도 영향권 내 총통행량⁷⁾은 하루에 약 275만 통행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 90% 수준인 247만 통행은 기존 도시철도 운행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통행량 규모이고, 약 10% 수준인 28만 통행이 순환철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총통행량 규모이다. 28만 통행 중 출퇴근 목적의 통행량은 약 15만 통행, 등하교 목적의 통행량은 약 2만 통행으로 분석된다. 순환철도의 이용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총통행량인 28만 통행 중에서 순환철도로 전환되는 수요를 산정하여야 한다.

| 그림 2 | 영향권 내 통행량 수준



주 :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하는 목적별 O/D 자료 활용.

7) 총통행량의 의미는 모든 교통수단의 통행량을 합산한 해당 지역의 총량적인 통행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통행량을 의미함

쟁점 사항

순환철도 이용수요는 타 교통수단 대비 순환철도가 제공하는 좀 더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에 승용차, 버스 등의 교통수단보다 순환철도의 서비스가 좋아질 경우에는 철도로 전환하는 출퇴근, 등하교 통행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순환철도 이용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력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는 순환철도 이용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 강점 요인

강점 요인은 첫째, 평택시에서 천안과 아산의 출퇴근 통행, 등하교 통행에 원활한 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수도권 첨단기업 이전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하다. 셋째, 기존 철도노선(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등)을 이용하므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2) 약점 요인

약점 요인은 첫째, 순환철도의 특성상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우회 시간과 거리가 많아 출퇴근, 등하교 통행에 있어서 순환철도의 경쟁력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순환철도가 서해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선은 KTX, EMU250 등의 고속선과 순환철도와 같은 저속선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서해선의 철도용량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서해선에 고속철도의 열차 운행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서해선은 복선 전철이고 평택선은 단선 비전철이므로 평택선의 전철화 비용, 또는 경우에 따라 신규 철도노선 건설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3) 기회 요인

기회 요인은 첫째, 서해선과 평택선을 이용하여 충남은 서울, 수도권 간 SRT 고속철도 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평택선의 복선전철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남에서 서해선, 평택선, 평택부발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강릉까지 직결 노선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서해선과 내포태안선이 연계될 경우 충남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을 직결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도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상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경우 순환철도 ‘신례원~합덕’ 구간의 공사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넷째, 평택선(포승~평택)과 연결되는 평택부발선(평택~부발)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에 신규사업으로 제시되어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경우 평택선과 연계하는 측면에서 평택선의 전철화 가능성이 기대된다.

4) 위협 요인

위협 요인은 첫째, 철도수요가 저조할 경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순환철도가 광역철도로 추진될 경우 운영에 대한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지

맺음말

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평택선은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물자 인입선 역할을 수행하도록 ‘창내~평택’ 구간이 사용 개시되었다. 평택선이 현재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평택선의 전철화 개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아산만 순환철도의 주요 영향권인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는 장래 택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많고, 인구와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도 비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환철도 운영은 대부분 기존선을 활용하는 계획이므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다른 철도사업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부분에서는 큰 장점으로 여겨진다.

순환철도의 약점은 철도역까지 접근시간이 길고, 중·장거리 통행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우회 시간이 많다. 순환철도가 기존 교통수단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심된다. 이는 순환철도의 교통수요와 연관되어 있어 경제성과 무관하지 않다. 위협 요인은 순환철도가 기존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공사비가 저렴한 철도사업으로 판단되나, 평택선의 전철화 가능성,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례원~합덕’ 구간 추진 가능성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순환철도가 광역철도로 추진될 경우 운영 손실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아산만 순환철도의 장점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약점과 위협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건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삼아 원활하게 철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베이벨리 메가시티와 충남의 문화관광계획

안용주 | 선문대학교 교수

문화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문화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네트 타일러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등 모든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¹⁾.’이라고 정의했고, 허버트 마르쿠스(1968)는 ‘사회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신이 갖는 함의’라고 설명하며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의 삶의 전체를 뜻한다²⁾.’고 하였다. 관광(Tou rism)은 주로 기분전환이나 여가를 즐기 위해 생활 공간을 벗어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UNWTO는 ‘즐거움, 위락, 휴가, 친구, 친척 방문, 업무,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 24시간 이상, 1년 이내 체류하는 행위’를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광은 점을 선으로, 선을 면으로 만드는 작업³⁾’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는 몇 가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이렇다 할 문화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저물었다. 문화계 전체에 휘몰아친 광풍은 미투⁴⁾와 코로나19로 정리할 수 있다. 페미니즘의 본격적인 대두와 함께 문화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는 문화라는 키워드가 거의 실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투로 시작된 페미니즘과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은 연극산업, 영화산업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인구의 이동을 막으면서 산업 전반을 빈사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람이 있는

1) Sir Edward Burnett Tylor, 1832~1917, 인류학의 창시자, Culture, or civilization ... is 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law, morals, customs,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2) There is a general concept of culture that ... expresses the implication of the mind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society. It signifies the totality of social life in a given situation, in so far as the areas of ideational reproduction(culture in the narrower sense, the ‘spiritual world’) and of material reproduction (‘civilization’) form a historically distinguishable and comprehensible unity.”

3) 안용주(2020), 월간인물 인터뷰 내용.

4)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행위로 미국에서 시작.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인 harvey Weinstein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를 달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위키피디아 참조 편집).

문화’ 문화비전2030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계획했지만 각종 사회적 이슈와 팬데믹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문화비전 2030’과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충남의 문화 및 관광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충남이 추진하고자 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와의 연계점도 찾아보고자 한다.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정착된 ‘일 중심 사회’를 통해 과도한 노동시간⁵⁾, 자유시간의 부족, 임금격차 등으로 인한 삶의 질 문제의 대두,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세대·젠더 간 갈등의 사회적 신뢰부족 문제 등이 얹히면서 사회의 갈등 치유와 창의적인 미래 비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집단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국민조차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편가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비전의 필요성을 갈구하게 되었고,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는 문화정책의 필요성, 미투(Me Too)운동을 통한 갈등과 견해 차이로 발생하는 문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 등이 정책배경으로 얹혀진다. ‘문화비전2030’의 키워드는 사람, 워라벨, 상생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는 다음 7가지로 카테고리화⁶⁾ 하고 있다. 첫째, 경쟁·효율이 아닌 사람과 생명 우선 문화, 둘째, 젠더 평등의 문화, 셋째, 4차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인간 감성사회로 유도, 넷째, 개인의 워라벨 문화, 다섯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상대성, 여섯째,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분권형문화정책, 일곱째, 지속가능한 상생 문화가 그것이다.

충남문화비전 2030

충남의 문화비전2030은 국가의 ‘문화비전2030’을 토대로 충남의 문화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⁷⁾이다. 선행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도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2014)’를 수립하였고, 문화환경의 변화와 도민의 문화적 수요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충남 도민의 품격있는 문화적 삶과 행복한 충남 구현’을 목적으로 충남의 문화비전과 전략을 수립⁸⁾한 것으로 보인다.

5) OECD국가 중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은 3번째 노동시간이 긴 국가(2021),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보다 576시간(약24일)을 더 일하고 있는 셈. 노동생산성은 38개국 중 27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0703#home>

6)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18.

7) 충남2030문화비전수립 최종보고서(2021), 충남연구원, pii.

8) 충남2030문화비전수립 최종보고서(2021), 충남연구원, pii.

내용적 범위를 살펴보면 ① 문화예술 ② 문화유산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문화관광 ⑤ 건강체육 ⑥ 문화행정의 여섯 개 부분으로 충남의 문화환경을 파악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충남의 문화기반 시설 수는 총176개이며 인구대비로는 경상북도와 더불어 6위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문화기반 시설의 특징을 보면 박물관 수는 57개소로 많은 편이지만, 미술관(9), 생활문화센터(8), 문화의 집(6) 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다.

본 계획에서는 홍성, 예산을 ‘내포 문화예술 거점’, 천안, 아산을 ‘첨단 문화콘텐츠 거점’, 서산, 당진, 태안을 ‘자연과 예술치유’, 보령, 서천을 ‘문화주도 지역재생과 신문화발전’, 공주, 부여, 논산, 청양, 금산을 묶어서 ‘백제·유교 역사문화거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배경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10년 주기로 세우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관광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을 확정 발표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된 국내·외 관광산업에 대한 능동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전략 수립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관광활성화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지역 연계 협력을 통해 관광지장 및 관광객 이동범위가 관광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 및 권역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의 목적은 ① 지속가능한 충남 관광전략 수립 ②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관광정책 수립 ③ 실현성을 고려한 효율적 관광개발전략 제시 ④ 차별화 전략 수립을 통한 충남 관광경쟁력 확보에 있다.

충남의 관광환경 분석

충남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을 중심으로 풍부한 해양레저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내륙에는 전통사찰, 문화재, 각종 축제, 지역 특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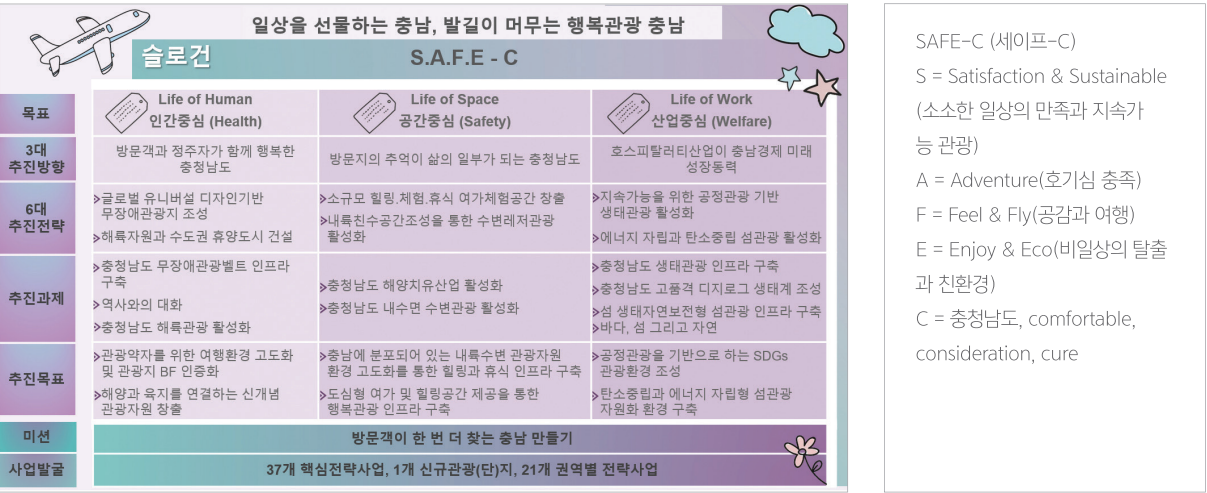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해수욕장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특산품과 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도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방문했다.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비전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사람’과 ‘공간’, ‘산업’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에서는 핵심방향을 ‘방문객과 정주가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 ‘무장애 관광과 수도권 휴양도시’로서의 전략을 제시하고, ‘공간’에서는 ‘방문지의 추억이 삶의 일부가 되는 충청남도’, ‘힐링·체험·휴식을 중심으로 서해안 해양자원과 내륙의 수변자원 활용’을 제시하고, ‘산업’에서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하기 위해 ‘공정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 관광’, ‘에너지 자립 등 탄소중립 섬관광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그림 1 |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 비전 체계도



맺음말

민선8기의 충남 문화관광 전략은 민선7기에서 수립한 각종 법정계획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내·외의 변화무쌍한 관광과 문화의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비전203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26)’에서 수립한 문화·관광 종합계획은 정부가 세우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충남이 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 법정계획서이다.

또한, 충남의 핵심과제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하여 충남의 문화관광계획, 경기도권

제7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

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19는 국내 및 국제 관광환경을 매우 엄중하게 바꿔 놓았고, 관광산업이 입은 일자리 및 산업 측면에서의 엄청난 데미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상황 속에 나오게 될 문화관광정책도 마찬가지다. 충남은 이와 같은 국내 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관광수요와 관광객의 행동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

- 해외관광객의 대폭 감소 및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의 침체 지속
- 패키지 투어에서 FIT로의 관광행태의 급속한 변화
- 스마트관광, 힐링·체험·치유 중심 관광소비 변화, 소비자 주도 커스터마이징 여행, 무장애관광, 공정여행 기반의 지속가능 관광, 칩시크⁹⁾, 랜선여행¹⁰⁾, 레저재핑¹¹⁾ 등 새로운 관광형태 출현

둘째, 백제의 DNA를 계승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 정책

- 백제의 문화양식과 문화DNA을 바탕으로 서해안의 해양자원과 내수면의 친수공간을 활용한 해륙관광(해양과 내륙자원)의 고도화
- 메타버스와 최신 버추얼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술 기반의 무장애관광 콘텐츠 및 최신 실감 기술을 이용한 충남형 디지털유니버스 구축

셋째, 충남관광의 지속가능성을 고도화하는 전략 수립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금강 하구언부터 금강 전체를 활용한 금강국가정원 조성, 신두리사구 및 소항사구 등 생태자원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린관광 활성화를 통한 충남의 지속가능 관광 패러다임 수립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유니크베뉴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MICE산업 활성화 전략

9) 칩 시크(Cheap-Chic): 저렴한 상품으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한 스타일을 일컫는 패션 용어. 패션에서 시작했지만 가전 제품, 유통, 항공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 중. 2005년 국내 수송시장의 0.1% 점유율 LCC(저가항공)이 2011년 34.9% 점유율 상승.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amiliar23&logNo=4012184143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10) 코로나-19로 인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여행지를 유튜브, SNS를 통해 해당 여행지의 영상 혹은 사진을 즐기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여행.

11) leisure zapping :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장비와 시설 중심의 현대캠핑문화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장비와 시설로 자연친화적 캠핑을 즐기자는 하는 감성캠핑,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일(work)+휴가(vacation)를 합성한 워케이션(worcation) 등.

넷째, 충남 혹은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 및 초광역 관광루트의 활성화 전략

- 글로벌트렌드인 ESG의 G는 거버넌스 의미
- 학문적 영역뿐 아니라, 산업, 행정, 조직 등 모든 부문에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충남 15개 시·군의 독자적인 관광전략을 벗어나 충남·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관광 루트 개발과 인접지역인 경기남부권(평택, 안성, 화성, 오산 등), 전북북부권(군산, 익산, 전주, 무주 등)을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루트 개발의 시대적 인식 필요
- 아산만 중심의 ‘산업형 베이벨리 메가시티’ 구상에서 제외된 문화관광에 대한 초광역 관광루트 전략을 통해 해양자원과 내륙자원을 융합하는 ‘충남·경기 초광역 문화관광벨트 전략’ 개발 필요 등

‘문화’와 ‘관광’은 두 가지로 떼어낼 수 있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화의 토대 위에 관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40)’을 비롯해 위에서 제시한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충남의 문화관광전략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베이벨리에 녹여낼 문화관광벨트 역시 충남과 경기도가 함께 문화관광자원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안연구

○ ● ○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필요성 검토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 정책 방향의 모색

현안
연구
|
01

고려인의 이주와 귀환

충남 체류 고려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필요성 검토

윤향희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인은 19세기 중엽부터 광복 때까지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들의 친족으로 구성된다.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인해 현재의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등)으로 이주한 이와 그 친족을 일컫는 말로 한국인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인 ‘카레이츠(Корейцы)’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만강 근처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인 연해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이전부터라고 전해지지만 1863년 한인 농민 13세대가 두만강을 물레 건너 연해주의 포시에트(Posyet) 지역에 정착한 것을 최초의 이주라고 한다.

1926년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연방 내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 등지로 대규모 강제 이주와 함께 1930년에서 1937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이는 소련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민족 강제 이주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이루어낸 ‘88올림픽’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재외동포법이 발효되었으나 고려인 동포의 입국은 제한되었다. 고려인 동포의 한국 내에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은 1999년 9월 개정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4년 3월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입국은 2006년 2월 방문취업 시행에 따라 이들의 입국이 가능해졌다. 2007년 방문취업(H-2) 비자 시행으로 고려인 동포의 귀환 한국행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노동 이주에 해당하고 있다. 러시아·CIS지역의 경제 불황, 한국 기업의 진출, 한국의 대중문화 유입, 선교사의 활동 등을 통하여 느끼는 기대감이 고려인의 귀환을 이끈 요인이며, 이들은 주로 가족과 동반 입국한다.

고려인은 오랜 시간 한국인과의 접촉이 단절되었고 한국어를 상실하고 한국인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한국 생활에 부적응 등으로 인해 이방인으로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지 않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은 대부분 집단 거주 형태와 생활하고 있다. 충남의 고려인 집단 거주지는 아산의 신창과 둔포, 천안의 신방동과 목천 그리고 입장, 당진의 합덕, 예산의 덕산, 논산의 취암동이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환경을 극복하고 고려인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충남체류 고려인 현황

고려인은 한국 입국 전 농업에 종사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이 한국 입국 후에도 한국에 농토가 있다면 농업에 종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충남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 증가로 인해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 유입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충남체류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충남의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고려인 동포의 농업인력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 체류 고려인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욕구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의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32,216명, 러시아 27,488명 등이 고려인 동포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외동포의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 방문취업, 영주, 방문동거,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2021년 12월 기준 국내체류 재외동포는 778,67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 478,442명, 방문취업 124,691명, 영주 113,718명, 방문동거 25,871명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인의 충남체류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인의 분류를 러시아 및 구소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의 국적자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 8,832명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아산 4,670명, 천안 1,695명, 당진 607명이 집단 거주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의 체류자격의 자들로 구성된 것이며 한국에서 일반연수(D-4), 유학(D-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의 자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충남체류 고려인은 3만여 명 정도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외동포의 취업 활동범위는 체류형태에 따라 다르다.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범위로 사회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외국국적 동포는 단순 노무행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취업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이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방문취업(H-2)의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방문취업제도'란 중국·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게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최초 입국 시 체류 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활동이 가능하다.

고려인 동포의 농업정착 수요조사

농업에 종사를 원하는 충남 체류 고려인 13명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고려인 동포 남자 7명, 여자 6명이다. 이들과 초기 면담을 통해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에 있는 7명을 선정하여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고려인 동포의 출신국은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키르기스스탄 2명, 러시아 1명이다. 이들의 나이는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이다. 한국 거주기간은 4년 2명, 5년 2명, 6년 2명, 9년 1명이다.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2명, 방문취업(H-2) 2명이다.

분석 방법으로 문헌조사와 함께 연구 참여자 7명에게 면담이 진행되었다. 고려인 동포의 한국에서 농업정착을 원하는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에 대한 방안제시가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한국 입국 전 농사 경험, 한국 입국 후 농업에 대한 관심, 한국 입국 후 농업을 통한 수입 정도, 농업을 통한 한국 정착 가능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한국 입국 전 농업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7명 모두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였고 그 중 5명은 부모님과 함께 농업 경험이 있었다. 농업품종은 주로 벼농사, 양파, 딸기, 채리, 수박, 해바라기, 양배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였다. 둘째, 한국 입국 후 농업에 대한 관심은 4명은 농사일을 하며 생활하고 싶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일이 자기 적성과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려인이 함께 모여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이들에게 땅이 주어진다면 고향에서와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한다. 셋째, 한국 입국 후 농업을 통한 수입의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처음 농사일을 시작했을 때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버는 돈보다 적어도 괜찮다고 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농사일하면서 최저시급이 주어진다면 좋겠다. 처음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를 짓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버는 수입 정도를 바라고 있었다. 넷째, 농업을 통한 한국 정착 가능에 대해서는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토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에서 공부해야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이 혼자 농사짓는 곳으로 이동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살펴볼 때 충남 체류 고려인 동포는 한국 입국 전 자신이 해 왔던 농업에 종사하기를 바라며 이주해 온 곳에서도 자신이 해 왔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고려인 동포의 농촌 정착 방안

충남 체류 고려인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답변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농사를 지을 농토가 주어진다면 고향에서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정착 수요요사를 통해 충남체류 고려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농업에 외국인 인력 충원과 확보이다. 현재 충남은 농촌인구의 부족현상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동거(F-1)를 단기 근로 형태로 전환하여 인력에 투입되었던 사례가 있다. 둘째, 농업정착을 원하는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 초기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국과 상이한 농업기술로 인한 기본교육과 정보를 국가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이한 농업규모, 품종, 기술, 시설 등의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고려인 동포의 성공적 농촌 정착을 위한 제안으로 집단 농업인 육성방안과 고려인 동포 주도 농촌사업, 지자체와 고려인 동포의 조력 그리고 고려인 1가구 농업사업 유형을 제시하면 첫째, 집단 농업인 육성방안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농촌 사업으로 토지, 작목, 파종시기, 재배방법에 대한 사업규모와 농지 선택 지자체 결정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월급체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 초기 사업추진 방법으로 적절하며 지자체가 작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전체적 결정권을 가지며 근로자는 안정된 직업 보장을 통한 생계 확보가 가능하다. 단점으로 초기 사업에 대한 수익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사업규모와 고용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 탄력적 고용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고려인 동포 주도 농촌사업으로 토지규모, 재배방법에 대해 고려인 동포가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근로형태는 고려인 동포가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형태이다. 장점으로 창의적인 농업생산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한국의 환경, 토지 유형과 작목 선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농업 경험 부족과 초기 농업 수익이 불확실하다. 셋째, 지자체와 고려인 동포의 조력이다. 기본적으로는 동포 주도 사업이 수행되며 지자체는 농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농기계 제공 그리고 농업정보를 제공한다. 농업농산물의 유통과 판로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연자로 기능할 수 있다. 초기에는 지자체와 고려인 동포의 기본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농업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지자체가 확보하고 고려인 동포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장점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에 따른 참여자의 창의성이 발휘되며 지자체는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통해 후견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점은 참여자의 창의성이 높은 경우 초기 정착 가능성이 높으나 부정적인 경우에는 관 주도의 고용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고려인 1인 가구 농업 사업 방안으로 한국의 농촌가구유형이다. 농업을 원하는 고려인의 특정 가구에 일정한 토지 임대와 함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농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농업정보 자료 제공과 농업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점으로 철저한 개인 계획과 책임으로 농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단점은 한국 농업환경의 지식부족으로 성공 가능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고려인 동포의 농업 사업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력과 정보지식 제공과 기술교육지원이 요구된다.

결론 및 한계

고려인 동포의 입국이 증가하고 이들의 집단 거주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충남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요성 검토 결과 고려인 동포의 농촌 정착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충남의 일손부족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과 함께 코로나19로 농촌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계절제 근로자의 입국 규제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한 방안으로 한국 입국 전 농업에 종사 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충남 농업 여건에 맞는 고려인 동포의 농업 정착과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지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충남체류 고려동포의 경제 활력 제고, 도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빛어 나가야 할 공존과 통합, 공감대 속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 및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농업정착을 위한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한계로는 고려인 동포는 한국의 토질과 농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농업 교육 및 정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교실의 내실화에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고려인 동포의 농업 확보로 인한 경제적 수확 시기까지 정착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익의 부재에 따른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한계에 따른 방안으로 한국어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농업기술 교육의 제공과 정보교류 조직 구성을 통한 커뮤니티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사업에 참여하는 고려인 동포에게 초기 농촌 정착 자원금을 부여하여 안정적 농업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들과 지자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판로 정보 등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 정책 방향의 모색

전지훈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지난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2009년 3월 최초 발의되어 20대 국회까지 15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은 저성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차원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의미하고 정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부 재정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막대한 극복도 주요한 도입배경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단순히 정의를 하면 주민들이 태어난 장소 및 관심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경우 조세를 공제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 의미를 고찰하면 중앙중심의 조세재정 배분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라는 행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의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예산으로 활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기부자는 고향 및 관심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금전적 혜택도 얻게 된다. 이러한 제도도입의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은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인구감소,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기대감이 높다. 특히 비도시권의 농어촌지역에서 재정확보와 함께 기부자에게 특산품 중심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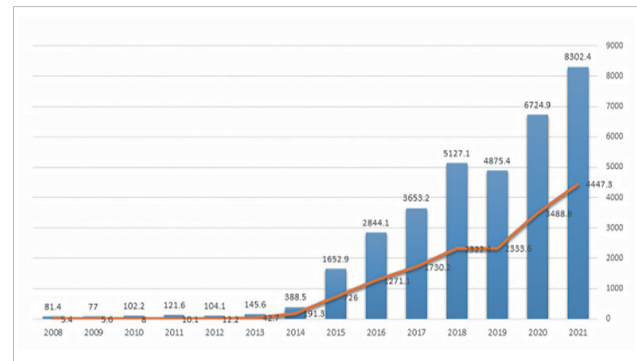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주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1조 목적 |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
| 제2조 정의 |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 | 기부자 거주지의 지방정부 제외 |
| 제4조 모금주체 |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가능 | |
| 제7조 모금방법 | •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가능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권유·독려는 불가 | |
| 제8조 접수 상한액 | •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 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서나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단체장 명의의 영수증 발급 •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 | 영수증 발급, 개인 연간 기부금 500만 원 상한액 |
| 제9조 답례품 |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 제공 •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는 제외 | 답례품 제공 가능 |
| 제11조 기금설치 | •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함 • 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의무기금 설치 기금의 목적사용 규정 |
| 제12조 제도연구·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해야 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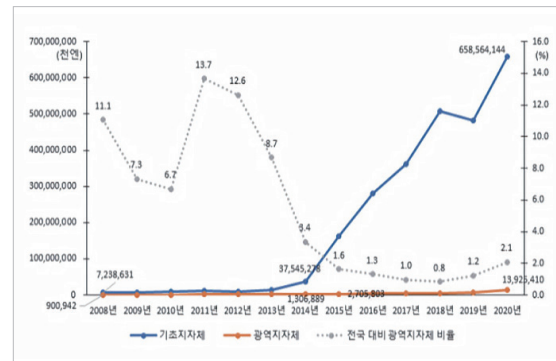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운영 사례

일본의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제도는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답이나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부금 공제제도를 확대 개정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특징이 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초기는 기부금액이나 건수 실적이 미흡하였으나 2013부터 답례품으로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답례품의 고품질화가 확산으로 기부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도 건수 및 납세 현황>

자료 : 신동철(2022) 참조.



<일본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기부건수 종합>

그리고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기부건수나 금액은 광역지자체가 2%로 미미하지만, 동일본대지진 시기인 2011년~2012년 사이에 기부행위가 급증하여 대형재난에 광역단위 기부건수가 급증한 특징이 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고향납세의 원스톱 특례제도를 마련하여 급여소득자가 5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확정 신고하지 않고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고향납세제도 시행 이후 일본 지자체는 기부행위의 지속유지 및 확산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특산품이나 문화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제공형
- ② 관광객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숙박형
- ③ 재난민이나 빈곤층을 돕기 위한 공익성 기부형

2008년 고향납세제도 시행초기에는 일본에서도 농수산물 등 고향 특산품을 주는 일회성 답례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소비 연속성을 지향하는 숙박상품 제공이나 고향주식 제공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 방문을 유인하는 관계 인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답례품 제공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에서 답례품 제공은 기부 행위 활성화와 기부자 확대에 기여함과 함께 답례품을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일본 지자체들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통해 지방기업을 육성하게 되어 고향납세제도 도입 시 상정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지원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식되고 있다(심재승, 2017).

고향납세와 같은 기부제도는 기부금의 활용방안이 지속가능한 기부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유학열, 2021). 일본에서 고향납세의 구체적 활용 분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 건강, 의료 부분에 고향납세 자원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79.1%에 해당하는 1,414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육과

인재육성 지원의 분야가 1,393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향납세 재원의 활용은 지역사회 의 사회정책지원의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 운영 측면을 살펴보면 일본은 고향납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고향납세 전문사이트가 민간중심으로 구축·운영되거나 고향납세 관련 홍보 및 유치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기획사도 출현하는 등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를 보인다(육동한 외, 2017). 대표적으로 사이넥스크(우리마을 고향납세)와 SB플레이즈(사토후루)의 경우 고향납세의 전 과정을 위탁 받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부금에서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아 운영된다. 이와 달리 트러스트뱅크(후루사토초이스), 라쿠텐, 아이모바일(후루나비) 등은 포털사이트로서 지자체 재원을 통해 홍보 및 신청자의 수납 대행서비스만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인식과 운영의 방향

현재 2023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청남도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충남도민 339명에 대해 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였고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5%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중장년층보다 20~30대 청년층에서 인지도가 낮았다. 제도 시행 전 시각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나의 고향에 대한 응원을 주요동기로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기부금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내역의 적극 투명 공개, 기부금의 지역현안문제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답례품 제공보다 다소 높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앞선 사례와 인식조사의 결과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세수증대 및 재원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해 고향사랑기부의 효과는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고향 및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도·농간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관계 인구의 증대 및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며 사회적으로 기부문화의 확산 및 지방에 대한 관심 증대의 중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착을 위해 충청남도가 수행해야 할 4가지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다른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운영과 실행 기반 구축** : 기부금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한 충청남도 전담조직 및 실행주체 구축 등 운영과 답례품 및 기부금 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 운영
- ② **기부자 확대와 교류사업** :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기부자 확대,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 마련 및 제도 인식확산, 홍보를 통한

기부자 및 기부행위의 확대

③ **기부금 활용 정책사업** : 기부자 의도에 부합하며 주민 복리 증진의 본래 목적이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지역 활성화 정책사업 연계와 추진방안의 설정

④ **답례품 운영 체계화** : 효과적인 답례품 구성과 조달을 위한 충청남도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답례품 질적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 제언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정책영역 제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이제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행되는 시점이다. 자발적 기부행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비롯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본 제도시행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기부금 유치 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본 제도에 대해 답례품으로 인한 기부금 유치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재정추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이러한 장밋빛 시선에는 우려가 크다. 오히려 기부금에 따른 소득세 환급과 운영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유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제도의 운영을 통해 충청남도에 어떠한 기회와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 냉정하고 면밀한 관점이 필요하다.

본 기부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민간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초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의 지역특색에 기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로 개발된 답례품(제품 및 체험 등 서비스 상품 등)으로 지역마다의 다양성을 부각시키고 타지역 주민과 지속적 기부행위로 관계 맺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본 기부제도가 인구감소의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본 제도는 기부지역으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고향과 지역이라

는 의미에서 광역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인식적 열세의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과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외부에서 충청남도로 기부금이 유입되기 위한 광역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기초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협력과 지원의 방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광역과 기초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청남도의 지역적 매력을 홍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도모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신동철(2022). 경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방안 연구.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심재승(2017).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111-124.
- 유학열(2021). 고향사랑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보고서.
- 육동한 외(2017).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열린마당

○ ● ○

기후정의 열차와 함께 한 924 기후정의 행진

열린
마당

기후정의 열차와 함께 한 924 기후정의 행진

조순형 | 기후위기충남행동운영위원장

‘설국열차 타기 전에 기후정의 열차 함께 타자.’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이번 9월 24일 기후정의 열차에서 함께 외쳤던 구호이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2013)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고 화학물질을 살포했지만, 오히려 빙하시대를 야기해 설국열차에 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계급투쟁 이야기이다. 설국열차 내에서의 심각한 인류 난제에서 부딪힌 빈부격차와 식량난 등의 결과를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기후위기에 대해 안이하고 기술주의적인 접근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결과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시청 일대에서 924 기후정의 행진이 열렸다. 전국에서 3만 5천여 명이 모였고 기후위기 충남행동도 기차 한량 전석 72석을 임차해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철도노조와 협약해 기차 외관에 충남 자체 슬로건을 부착하고 용산역까지 홍보하며 갈 수 있었다. ‘924기후정의 열차, 석탄 대신 태양과 바람으로, 기후위기 충남행동’. 장항선 열차가 정차하는 곳마다 시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슬로건을 읽어 내려갔고, 어떤 시민들은 ‘기후정의 열차’ 문구 앞에서 삼삼오오 셀카를 찍기도 했다. 서울 집회로 향하는 장항선 열차 밖으로 송전선도 같이 타고 흘렀다. 서울 사람들이 스위치 하나로 쓰는 전기가 충남 지역민의 피눈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우리는 행진 내내 열심히 구호를 외쳤다.

‘석탄 대신 태양과 바람으로’.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앞에 에너지 전환의 시급함이 이제 더 이상 충남만의 절박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충남은 전국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위권 내 업체 중 5개 업체가 충남 소재 업체이다. 충남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4,000만 톤(명세서 기준)으로 전국 배출량의 24.2%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2016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도 충남이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1위부터 7위까지 7개 업체가 모두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 포스코, 2위부터 6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력으로 하는 발

전사, 7위가 현대제철이다. 석탄 대량 사용 7개 업체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4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멘트 업체도 9위를 차지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임이 명백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석탄'을 하루빨리 퇴출해야 한다.

많은 과학자는 지금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07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지구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한다. 지구 온도 상승 1.5도까지 남은 탄소 예산은 6년 7개월이다. 그렇다면 지금 포기해야 하는가? 이번 9·24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한 시민의 피켓 문구처럼 '(차라리)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이라도 품어'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미 세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포함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넷제로에 합의했으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입법안을 공개해 탄소 고배출 산업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70%를 달성기로 하는 등 에너지 믹스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많은 연구 자료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원은 태양과 바람이 비교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생산 고용 유발효과가 원자력발전의 1.4배에 달한다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낮다는 통념과는 달리 태양광, 풍력발전은 현재도 원자력, 화력발전보다 월등히 경제효과가 높고,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석탄을 다시 사들이고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탈석탄의 기조가 바뀐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석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더 이상 석탄이 옵션이 될 수 없음을 미국의 에너지원별 균등화발전비용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퇴출하느냐일 뿐이다.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또한 제일 높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 57기 중 29기가 입지해 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연기관차 아산자동차 공장과 서산 동희오토 부품생산공장,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입지해 있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가 기반 산업을 책임져 왔던 충남이 이제는 산업을 전환해야 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미 입증된 재생에너지 정답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몫일 것이다.

이번 924 기후정의 행진의 주제는 '기후정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에 더 큰 책임을 진 정부·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 또 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해 낙오되거나 배제되는 이들(국가) 없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가 공존하는 시스템의 가장 큰 전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일 것이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가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개인이 집회에 나가 구호 외치는 행동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고, 이런 방식으로 기업과 정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올해 3만 5천 명이 서울 시청 일대를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의 15세 소녀 크레타툰베리의 1인 결석시위에서 비롯되었다. 924 기후정의 행진은 우리 안의 비관주의를 극복하고 연대함으로써 개인의 미약한 힘이 집단지성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바로 이번 924 기후정의 행진 후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제정 국회의원 5만 달성을 이뤄낸 기적 말이다. 기적을 만들어 내는 일, 그 최일선에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함께할 것이다.



언론이
바라본
충남

○ ● ○

충남 경제 취약점은? 대기업 편중-시군 간 불평등-인구감소

언론이
바라본
충남

충남 경제 취약점은? 대기업 편중-시군 간 불평등-인구감소

심규상 | 오마이뉴스 대전충청본부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시기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충남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도내 시·군 간 불평등, 인구감소, 대기업 편중’을 꼽을 수 있다.

충남은
‘천아서당’
중심의 세상

시·군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15개시·군 중 북부권 ‘천아서당’(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 시·군이 충남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로는 천아서당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충남은 사회경제적으로 천아서당 4개 북부권 중심 구조다. ‘천아서당’이 도 평균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 비율과 고소득 가구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도농 격차로 이어져 있다.

사회문화시설의 쏠림도 극심하다. 영화관을 예로 들면 천아서당에만 15개가 집중돼 있다.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15개 상영관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스크린 수로는 55개로 천아서당 81개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교도 도내 19곳 중 11곳이 천아서당에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쏠림은 전 분야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다. 정부가 2021년 지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8곳이 포함됐다. 시 단 위인 공주, 보령을 비롯해 금산, 부여, 청양, 서천, 태안, 예산 등이다. 대부분 서해안권과 남부권 인데 서해권보다 남부권이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 충남은 2021년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출생률이 급감했다. 시·군별로는 부여, 태안, 청양, 보령이 급감했는데 특히 부여는 충남 평균보다 10명이나 출생률이 낮았다.

충남에서 출생,
성장해도
지역 내 취업
어려워

인구감소의 또 다른 이유는 유소년층과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다. 대부분 시·군이 출생 이후 4세 이전에 한번, 대학 입학 전후 급격한 청년층 감소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 기반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공주에서도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태다. 충남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더라도 충남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주요 대기업 위기오면 충남 경제 동반 위기 위험

세 번째는 대기업 편중 산업구조다. 충남은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4대 주력산업이 축이다. 게다가 삼성과 현대 등 몇 개 대기업 위주다. 이마저도 북부권 '천아서당'에 집중돼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전국적 저성장 기조 아래서도 충남이 고성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거꾸로 대기업에 위기가 올 경우 이는 충남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실제 2022년 들어 반도체 가격 하락, 디스플레이 산업 재편에 따른 생산량 감소, 높은 수입 물가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지역 경기도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과 전기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구조다. 게다가 대기업 편중 산업구조는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심화를 크게 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일까?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천착해야 한다. 잘 나갈수록, 어려울수록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 최고의 성장률, 외자 유치 1위라는 성적표에 취해 대기업과 천아서당 위주의 경제전략을 고수하거나 더 확대해온 건 아닌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구실로 또다시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펴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시·군별 지역적 특색과 강점을 다시 살피고 산업입지에서부터 균형 잡힌 계획을 다시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소비재가 아닌 설비재와 생산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양쪽에 똑같은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편중된 힘을 실어줄 때 가능해진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해법 될까?

인구 유입과 정착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일자리,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찾아 새로운 산업을 집적하고 경제적 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메가시티 붐이 일고 있다. 지방거점 지역에 메가폴리스를 뛰어넘는, 서울과 비견될 만큼 주변 지방 도시를 하나로 묶어 인구 500만 단위 인구 규모의 큰 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양 회자하고 있다.

세종시가 애초 계획보다 면적 등이 커지면서 충남은 세종시 빨대 효과로 여러 손실을 보고 있다. 때문에 규모를 키운다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종과 충북, 대전, 충남을 묶어 새로운 도시명을 부여하면 지역 간 불균형, 인구감소, 대기업 편중이 해결될까? 오히려 지금의 수도권에 초 메가시티가 되도록 부채질하고 수도권 초 집중화에 따른 폐해만 제2 메가시티, 제3 메가시티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 권 A t o Z

○ ● ○

충남연구원 인권 통합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 일터를 고민하다

인권
A to Z

인권통합교육은
왜 실시하였고
어떤 뜻을
가지는가?

인권통합교육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충남연구원 인권 통합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 친화적 일터를 고민하다¹⁾

강마야, 박춘섭, 유영민, 이민우, 이태호, 이해란, 전춘복, 조병욱, 조성 | 충남연구원 연구자(가나다 순)

2021년 12월,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2022년, 인권경영센터에 바란다】의 조사결과에서 충남연구원 구성원들은 인권경영센터가 조직에 인권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다양한 인권교육과 구성원 간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경영센터에서는 2022년 3월, “충남연구원 구성원이 모두 즐겁게, 일하는 연구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소규모 집담회 방식의 【인권통합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권통합교육 후속 심화과정으로서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제1기 인권지킴이 모임(총 10명)을 꾸려서 【(가칭) 충남연구원 인권 친화적 일터 가이드라인】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충남연구원 인권문제에 대하여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 직급별 참여 인원을 모집하여 참여형, 소통형 방식으로 진행, 기록과 근거를 남기고자 연구과제 수행방식으로 진행하였음에 의미가 있었다.

인권통합교육은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급별·소그룹 규모의 집담회 쌍방향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인권통합교육 목표는 “인권의 구조(권리 및 의무주체)를 이해하고, 상호평등과 존중, 참여의 인권 역량을 증진하며, ‘인권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서 동료와 함께 일터에서 지켜나가야 할 인권가이드라인을 만든다.”로 설정하였다.

1) 강마야 외(2022)의 “2022년 충남연구원 인권통합교육 결과분석 및 인권 친화적 일터가이드라인 도출 연구(현안과제 연구, 충남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저자 주). 이하 그림의 출처 또한 이로부터 나왔기에 별도의 표기는 생략함.

인권통합교육 진행방식은 회차당 교육참석자 수를 약 15명 이내로 한정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 내용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였다. 강사는 외부 전문기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에 의뢰하였다. 일반적인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지양하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에 대한 토론 방식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의 인권인식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그림 1] 참고).

인권통합교육 결과는 전체 구성원의 87%(130명)이 참여하였고 참석자 중 89%(114명)가 인권인식실태조사에 응답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 | 2022년 충남연구원 인권통합교육 내용 및 현장사진

| 핵심 메시지 | 하는 일은 달라도, 각자는 모두 평등하게 존엄하다(평등하고 존엄한 관계가 인권) 민주적 소통과 참여가 인권친화적 일터를 만든다(인권의 눈으로 일터를 새롭게 보기) | | | 현장 사진 |
|--------|---|---|-----|--|
| 교육계획 | 단계 | 내용 | 시간 |  |
| | 도입 | 인사 / 교육에 대한 안내와 기대 나누기 | 10분 | |
| | 사례로 풀어가기 | ●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 사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으로 나누고 사례지 전달 (총 2종, 모둠별 1종)• 질문지를 토대로 이야기 나누기(포스트잇/아젤패드 사용)• 모둠별로 나눈 이야기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진행자는 피드백과 추가 질문• 인권위원회 결정문과 유권 사례(ppt), 무엇이 인권침해인가 핵심정리• 영상 함께 보고 쉬는 시간 | 40분 | |
| | | 휴식 | | |
| | 토론 | ● 우리가 만드는 ‘인권친화적 일터’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질 감수성 신호등 테스트• 패들렛을 활용, 댓글 의견 모음(인권의 눈으로 일터를 바라보자)• 우리 일터의 좋은 점과 바꿔어야 할 점• 댓글 의견에 대한 공유와 토론, 어떻게 변화를 만들까?• 함께보면 좋을 자료(ppt), 영상 | 40분 | |
| | 마무리 | 질문과 소감 나누기 | 10분 | |
| 기 타 | 사례지, 전지, 필기도구, ppt, 신호등(종이/부들 준비), 패들렛 링크, QR코드 프린트 등 | | | |

첫째, 충남연구원 인권인식실태조사(객관식) 결과로써 인권통합교육에 대한 평가(교육방법, 내용 등)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연구원 인권친화점수는 81점 이상인 경우 34명(29.8%), 80점~61점인 경우 55명(48.2%), 60점~41점인 경우 18명(15.8%), 40점 이하인 경우 7명(6.1%)이 응답하였다. 회차별 직급별 교육 및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직급 간 인권친화점수 인식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그림 2] 참고).

| 그림 2 | 충남연구원 인권친화점수 분포

| 회차 | 80점이상 | | 80점~60점 | | 60점~40점 | | 40점이하 | | 총계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 1회차 | 7 | 70.0 | 2 | 20.0 | 1 | 10.0 | 0 | 0.0 | 10 |
| 2회차 | 5 | 29.4 | 11 | 64.7 | 1 | 5.9 | 0 | 0.0 | 17 |
| 3회차 | 3 | 21.4 | 7 | 50.0 | 3 | 21.4 | 1 | 7.1 | 14 |
| 4회차 | 3 | 27.3 | 5 | 45.5 | 1 | 9.1 | 2 | 18.2 | 11 |
| 5회차 | 3 | 50.0 | 3 | 50.0 | 0 | 0.0 | 0 | 0.0 | 6 |
| 6회차 | 1 | 9.1 | 6 | 54.5 | 2 | 18.2 | 2 | 18.2 | 11 |
| 7회차 | 3 | 20.0 | 7 | 46.7 | 3 | 20.0 | 2 | 13.3 | 15 |
| 8회차 | 3 | 30.0 | 4 | 40.0 | 3 | 30.0 | 0 | 0.0 | 10 |
| 9회차 | 2 | 20.0 | 6 | 60.0 | 2 | 20.0 | 0 | 0.0 | 10 |
| 10회차 | 4 | 40.0 | 4 | 40.0 | 2 | 20.0 | 0 | 0.0 | 10 |
| 총계 | 34 | 29.8 | 55 | 48.2 | 18 | 15.8 | 7 | 6.1 | 114 |

둘째, 충남연구원 인권인식실태조사(주관식) 결과로써 ① 연구원의 좋은 점은 기본 노동권 보장(근무시간 준수, 연차 등 휴가 사용, 사내 복지 등), 업무수행 자율권 보장(자유로운 근무환경 보장 등) 측면에서 준수하다고 평가하였다. ② 연구원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점은 이기주의, 소통과 배려 부재, 구성원 간 갈등과 편 가르기 문화, 업무과다 및 편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본원과 센터 간 차별 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③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권리와 의무, 책임성 간 균형점 찾기, 자기자리에 대한 역할 인식, 상호존중과 배려, 직원 간 공론의 장 마련, 갈등과 반목 해소를 위한 인권경영센터 노력 등을 주문하고 있었다.

셋째, ‘인권통합교육 이후 나의 다짐’에 대한 의견으로써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역지사지’였다. 즉, 상대방을 이해해보고 다름을 이해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충남연구원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및 배려’가 가장 우선해야 함에 대다수가 공감함을 알 수 있었다.

인권인식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서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기 인권지킴이모임을 꾸리고 총 4회에 걸쳐서 소통하였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자’라는 과제를 도출하였고 인권경영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충남연구원 인권 친화적 일터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아래와 같이 총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세부 내용을 만들었다([표 1] 참고).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 표 1 | (가칭) 충남연구원 인권 친화적 일터 가이드라인(안)

| 구분 | 분야 | 주요 내용 | 비고(그림) |
|---------|---------------------------|--|--------|
| 가이드라인 ① | 인사하는 문화, 반말 않는 문화 만들기 | 밝게 인사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 반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
| 가이드라인 ② | 호칭 제대로 불러주기 | 올바른 직급별, 직책별 호칭을 사용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 |
| 가이드라인 ③ |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업무환경 만들기 | 업무 지시를 명확히 하여 업무 지시를 받는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는 문화 조성, 일의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시 기능과 역할에 맞는 업무하는 문화 조성 | |
| 가이드라인 ④ |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근태 등 시간 관리를 준수하는 문화 조성 | |
| 가이드라인 ⑤ |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문화 만들기 |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는 문화에서 작은 성과라도 긍정적인 말로써 칭찬을 자주 해주는 문화 조성 | |

인권통합교육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충남연구원 인권통합교육의 의의와 한계는 ① 색다른 교육방식 시도로서 참여율을 높인 점, ② 교육과 더불어 실시한 인권인식실태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기록으로 남긴 점, ③ 교육 후속 과정으로서 10명 인권지킴이 모임을 꾸려서 인권 감수성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점, ④ 직급별 인권 감수성 차이도 드러나서 역차별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점, ⑤ 구성원 대다수가 소통과 관계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긴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들도 있다. 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원활한 소통과 자율성, 소통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일상 커뮤니티 만들기, 지금보다 소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창구를 만드는 노력 등이다.

둘째,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나의 다짐에서 우리의 다짐으로 확산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인권 친화적 일터 만들기는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약속 수준이므로 나의 다짐에서 우리의 다짐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 친화적 일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서별 챌린지, 캠페인 전개, 카드 뉴스 또는 포스터 제작, 주기적인 소통 활성화 간담회, 칭찬벽도 및 칭찬 포스트잇 부착 등 일상에서 노출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로서 정착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인권통합교육 시 보완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충남연구원과 유사한 기

관의 사례 내용 교육, 직급별 인식 차이와 역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원활한 소통방법을 주제로 하는 조직 맞춤형 교육, 교육이라는 단어보다 자율성과 편안함이 묻어나는 '모임' 등으로 지칭하여 소통 중심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제 첫 시작인 만큼 충남연구원이 인권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진행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마야,공형구,박춘섭,유영민,이민우,이태호,이혜란,전춘복,조병욱,조성(2022), 2022년 충남연구원 인권통합 교육 결과분석 및 인권 친화적 일터가이드라인 도출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연구원 소식

○ ● ○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서 충남도 우수 정책사례 발표
농산물가공수출·국방산업·차량 반도체 등 충남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빅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공유의 장 마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힘센 충남 미래 청사진 마련할 터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서 충남도 우수 정책사례 발표

해양쓰레기 저감, 충남도 최우수기관, 태안군 우수기관으로 선정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술과 맞춤형 정책 개발... 지방정부 역할 강화 의지 보여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9월 22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이하 IMDC)'에서 '충청남도 지역해양환경 선진 정책사례'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주관했다.

해양쓰레기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IMDC는 전 세계 해양폐기물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모여 해양쓰레기 예방 및 수거, 저감 인식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충남연구원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법률 및 정책' 주제의 기술 세션을 충청남도와 함께 개최하며 해양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먼저 충남연구원 윤종주 박사는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과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추진사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화 센터장은 '하천 부유 쓰레기 차단시설 개발사례'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진용 연구원은 '수치모델을 이용한 서해안 해양쓰레기의 유입 경로 분석'을,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지윤 연구원이 '한국의 해양쓰레기 정책 소개'를 발표했다.

윤종주 박사는 "지난해 충남도가 추진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이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서도 다시 한번 충남의 앞선 정책추진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에서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기관으로, 태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다.

충청남도 임민식 해양수산국장은 "이런 성과는 충남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충남연구원 정책연구 활동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번 콘퍼런스에 소개된 다양한 국내외 선진정책을 토대로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술과 맞춤형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충남연구원의 기술 세션은 전체 110개 세션 중 주목해야 할 주요 세션에 소개될 만큼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농산물가공수출·국방산업·차량 반도체 등 충남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10월 21일 연구원에서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연구원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미래기획위원회가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제안한 농산물가공수출단지, 국방산업단지,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야별 이슈와 전망, 대응 방향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농산물가공수출단지' 분야의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박사는 최근 한류가 의·식·주 등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선식품류보다 가공식품은 확장성, 부가가치, 고용효과 등이 더 크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형 교수(서경대학교) 역시 "농·공·상이 고르게 발달한 충남은 가공식품수출산업을 육성할 기반이 탄탄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국방산업단지'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갑진 예비역 육군 소장은 국방 비전 2050의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군·

산·학·연 융합의 방산 협력체계와 무인·자율화 기반 스마트 군수혁신 등 추세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KAIST 안보융합원 김성도 교수는 "국방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계룡, 논산 등 국방산업이 집약된 충남권의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 반도체산업' 분야 주제 발표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영수 박사는 자율주행을 둘러싼 기술개발의 추세를 소개하면서 "자율주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획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김형원 교수는 "산·관·학·연 시스템 구축에 지방정부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충남도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유동훈 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경제 블록화 등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고 미래 먹거리 발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에 미래기획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충남의 미래를 앞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빅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공유의 장 마련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11월 3일~5일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지리정보학회가 주관한 추계학술대회 일환으로 제주에서 열린 이번 충남연구원 특별 세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과 적용 방안' 등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최돈정 박사는 '지역계획 사업 모니터링 클라우드의 구축과 적용연구(충청남도를 사례로)'를, 오혜정 박사는 '지자체형 공간환경 통합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을, 손성규 연구원은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력 보강방안 분석모델 개발 및 적용 연구'를, 강마야 박사는 '지자체 농정 개선을 위한 공간 데이터 기반의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종합실태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최돈정 박사는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수립하는 여러 정책 사업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계획수립을 위해 활용되는 여러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발굴·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김성환 개발정책팀장은 “충남도의 수많은 데이터를 지도에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데이터 간 연계성을 분석해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증거기반 융복합정책연구회' 오혜정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의 융복합적 역할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충남 연구원은 충남도의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다른 분야 데이터와의 교차분석 및 융복합 연계를 통해 정책을 고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힘센 충남 미래 청사진 마련할 터

2022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합동 워크숍 개최

충남연구원 농업6차산업센터는 충남도와 함께 11월 23일부터 이틀간 예산 덕산 스피러스 리솜에서 '2022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유관기관, 담당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충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충남도는 올 한 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이끈 유공자 표창과 2022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에 상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공 : ▲당진시 농식품유통과 임영철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이동석 ▲금산군 농업정책실 최원호 ▲(사)충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박명주

전통 식품 발전 유공 : (발효식품 분야) ▲예산샘골농원 백승준 (전통주 분야) ▲민속주왕주 이규연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분야 : ▲농업회사법인

옛향기마을방앗간(주) 김정희 ▲농업회사법인 홍담 이태호. 이상 8명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박사는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과 과제'를 주제로 가진 특별 강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이해와 농촌융복합산업이 나아갈 길 등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농촌융복합산업 제품판매장 운영 현황 발전방안과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의 온라인 시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오성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은 “미래의 충남 농업·농촌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같이 새로운 도전으로 힘센 충남을 그려 나갈 것”이라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NI
정책현장



충남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의 협력적 해결
장창석 전문연구원



미래의 생명공간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방안은?
김영일 전임연구위원,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인포
그래픽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도전
윤종주 센터장, 이상우 연구원



데이터로 보는 충남 소상공인 생활
김혜정 전임연구위원, 김다희 연구원

정책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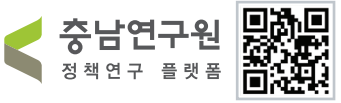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위원, 손성규 연구원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위원, 손성규 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